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으로 두 번 임명되다

1858년 ~ 1936년



1 개요

사이토 마코토는 메이지(明治)에서 쇼와(昭和) 시기에 걸쳐 활동한 일본 해군 군인이자 정치가였다. 1898년 해군차관, 1906년 해군대신을 역임하였으나 1914년 지멘스(Siemens) 사건에 연루되어 실각하였다. 1919년 3·1 운동 직후 제3대 조선총독으로 취임해 식민지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에서, 폭력과 회유 양면 정책을 구사하며 경제 수탈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하였다. 1929년 제5대 조선총독으로 다시 취임하였다.

2 해군 시절

사이토는 1858년 미즈사와(水澤, 현재의 이와테현)에서 센다이 번(仙臺藩)의 번사(藩士)인 사이토 고헤이(齋藤耕平)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 이름은 도미고로(富五郎)였다. 1873년 해군병

학료(海軍兵學寮, 이후 海軍兵學校)의 예과 생도가 되었고, 본과로 진학할 때 마코토(實)로 개명하였다. 1879년 해군병학교를 졸업하고, 1882년 해군 소위로 임관하였다.

1884년부터 1888년까지 사이토는 미국에서 유학하며 공사관의 주재무관(駐在武官)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해군 제도와 수뢰(水雷) 등 병기에 관해 조사하는 한편 육해군 수뇌들을 접대하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특히 해군대신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를 수행해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군사 현황을 시찰하고 정세와 풍습을 경험하였다. 1888년 귀국해 사이토는 해군참모본부에서 일했다. 1892년에는 해군대신 니레 가게노리(仁禮景範)의 장녀와 결혼하였다. 니레는 사이토의 해군병학교 시절 교장이었고, 해군성 군사부(軍事部)에서 근무할 당시 군사부장이기도 하였다. 사이토는 당시 해군을 지배하고 있던 사쓰마(薩摩) 파의 유력자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후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청일전쟁 당시 사이토는 시종무관(侍從武官)으로 전시 중 설치된 최고통수기관大本營에서 근무하였다. 인천 경비함과 인천에 파견된 해군장교에게 중앙정부의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순양함 아키즈노즈(秋津洲)와 이쓰쿠시마(巖島) 함장 등을 거쳤다. 1898년 그는 해군대신 야마모토 곤베(山本權兵衛)의 추천으로 해군차관에 취임하였다. 관례상 해군차관에 소장이나 중장이 취임하는데, 대좌로 진급한 지 얼마 안 된 사이토의 취임은 이례적이었다. 그는 해군대신을 보좌해 제3기 해군 군비 확장을 실현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1906년부터 약 8년 동안 해군대신을 역임하였다. 사이토는 해군차관과 해군대신 등을 역임하면서 군사행정가로서 두각을 나타냈다. 1907년 러일전쟁의 전공으로 남작을 수여 받고, 1912년에는 해군대장으로 승진하였다. 하지만 1914년 일본 해군과 독일 지멘스의 뇌물 수수 사건에 연루되어 해군대신에서 물러났다.

3 제3대 조선총독(1919~1927)

현역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중 사이토는 갑자기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으로부터 조선총독 취임권유 받았다. 3·1 운동으로 조선총독에서 물러난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의 후임으로 1919년 제3대 조선총독에 취임하였다. 당시 총리대신 하라 다카시(原敬)는 군인이 아닌 문관 출신의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 정무총감을 주목하고 있었다. 현역 육·해군이 조선총독으로 취임하던 제도를 바꾸어 문관 총독을 임명하려 한 것이다.

하라의 정책에 대해 육군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찬성했지만, 원로(元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전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등이 반대하였다. 고민 끝에 하라는 야마가타를 포기하고, 육군이 아닌 해군이면서 자신과 같은 지역 출신인 사이토를 발탁하였다. 후에 하라는 사이토와 함께 부임하는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에게 '무관이면서도 무관 같지 않은, 더구나 육군이 아닌 해군 출신인 사이토를 선발하는 과정에 정말 고통이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결과적으로 사이토가 제3대 조선총독에 취임함으로써 식민지 관제(총독무관제)가 개정되고 식민지의 수뇌부가 교체되었다.

사이토는 총독 취임과 함께 치안 유지, 교육 보급과 개선, 산업 개발, 교통과 위생 정비, 지방제도 개선 등을 조선 통치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였다. 그것은 총리대신 하라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였다. 하라는 사이토가 조선으로 부임할 때 「조선통치사건(朝鮮統治私見)」을 제시하며 일본의 교육, 지방제도, 법률, 제도 등을 식민지 조선에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먼저 사이토는 무단 통치로 악명이 높았던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경찰권을 지방장관에게 이관하는 한편, 경찰과 군대를 증강하였다. 교육 분야에서는 조선인의 교육 요구를 수용해 학교 시설을 확충하고, 수업 횟수를 일본과 동일하게 하였다. 반면 조선어 시간을 축소하고 일본어 시간을 확대하였다. 또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한글 신문과 잡지의 발행을 허가하였다. 이 무렵 『동아일보』, 『조선일보』, 『개벽』, 『신생활』 등이 창간되었다. 하지만 기사를 검열해 삭제하거나 정간과 폐간 등의 조치로 언론을 억압했으며, 1925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반일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였다.

경제 분야에서 회사령을 철폐하고 일본 자본의 조선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조선인 일부에게 이익을 공여해 일본 통치의 수혜를 주고, 그들을 체제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 그리고 1918년 쌀소동 이후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였다. 지방제도와 관련해도(道) 평의회, 부(府)·면(面) 협의회 등 지방 자문기관을 설치하고, 조선인을 관리로 등용함으로써 조선인을 회유하려 했다.

사이토 총독의 시기에 식민지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폭력과 회유 양면 정책을 구사하며 경제 수탈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하였다. 다만 당시 일본에서 정당 정치가 융성하여,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와 헌정회(憲政會)가 추천한 미즈노 렌타로나 시모오카 주지(下岡忠治) 등이 정무총감으로서 능력을 발휘하였다. 반면 '정무총감 있고, 총독 없다'라는 세평이 있을 정도로 총독의 리더십은 제한적이었다. 실제 사이토는 조선총독부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장회의에서 발언을 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1927년 제네바 군축 회의 전권대사로 파견되었다가, 동년 12월 병을 이유로 조선총독에서 물러나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에 임용되었다.

4 다시 조선총독에 취임하다(1929~1931)

1929년 조선총독 야마나시 한조(山梨半造)가 뇌물 의혹 사건으로 해임되면서, 사이토가 다시 조선총독에 취임하였다. 당시 총리대신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는 입헌정우회 계의 야마나시 한조를 사임시키고 입헌민정당(立憲民政黨) 계의 전 대만총독 이사와 다키오(伊澤多喜男)를 조선총독에 임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추밀원과 육해군은 물론 천황도 반대하였다. 천황은 정당 중심의 관료 구성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총리대신은 사쓰마 파를 배려해 해군대장 출신인 사이토를 조선총독에 추천하였다.

사이토는 동년 9월 조선총독에 취임해 장문의 유고(諭告, 정책을 일반에게 알림)를 발표하고, '민도(民度)의 향상을 감안해 민의의 창달에 힘쓸' 것이라는 취지를 알리며 조선에서 자치권의 확장을 피력하였다. 그는 조선총독 취임에 앞서 총리대신에게 '참정권 부여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이쿠타 기요사부로(生田清三郎)에게 '조선 민족이 최

종적으로 도달할 이상적 정치 조직 및 이에 이르는 과정 단계'에 대해 소신과 희망을 보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조선 내외의 통치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민족운동과 정당 세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응해 조선 지방의회를 구상하였다. 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조선 관련 예산의 일부에 관해 자율적인 심의와 사용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사이토는 식민지 통치에 개입하려는 일본 의회에 대해 총독의 위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예로 1931년 조선총독부가 충청남도 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예산을 제출했는데, 중의원의 다수당이자 여당인 입헌민정당이 삭감하였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를 경질할 목적으로, 여당이 정부 의결의 예산을 부결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사이토는 천황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조선총독의 위신을 내세워 의회에서 여당에 대항하였다. 그리고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귀족원(貴族院)에 호소해,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켰다. 하지만 그 후 유증으로 그는 조선총독에서 경질되었다.

1932년 해군 반란 사건인 5·15 사건으로 총리대신 이누가이 쓰요시(犬養毅)가 살해되고, 사이토가 총리대신에 취임하였다. 여당 당수가 아닌, 군인 출신이 총리대신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한편 이미 일본군 내 파벌의 세력화를 반영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만주국을 승인하고 국제연맹에서 탈퇴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일본의 고립을 심화하였다. 그런데 중의원의 절대 다수인 입헌정우회는 사이토의 총리대신 취임을 차기 정부를 위한 과도 단계로 이해하였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부를 흔들었고, 결국 뇌물 의혹 사건을 날조해 사이토를 총리대신에서 물러나게 했다. 제국인조견사주식회사(帝國人造絹絲株式會社)의 매수와 관련해 대만은행(臺灣銀行)과 대장성(大藏省) 관계자에게 뇌물이 주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파장이 점차 정부 관리에게 파급되자 사이토는 사직을 결심하였다. 단 피고인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조차 사상누각이라고 평한 사건이었다. 1934년 총리대신을 사임한 사이토는, 이듬해 천황의 최측근인 내대신(內大臣)에 취임하였다. 1936년 2월 26일 육군의 청년 장교들이 1,483명의 병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고, 천황을 속이는 중신회의(重臣會議)를 비난하며 총리대신과 대장대신 관저 등을 습격하였다. 사이토도 도쿄 자택에서 살해당하였다.